생생 여성행동 소개

1. 경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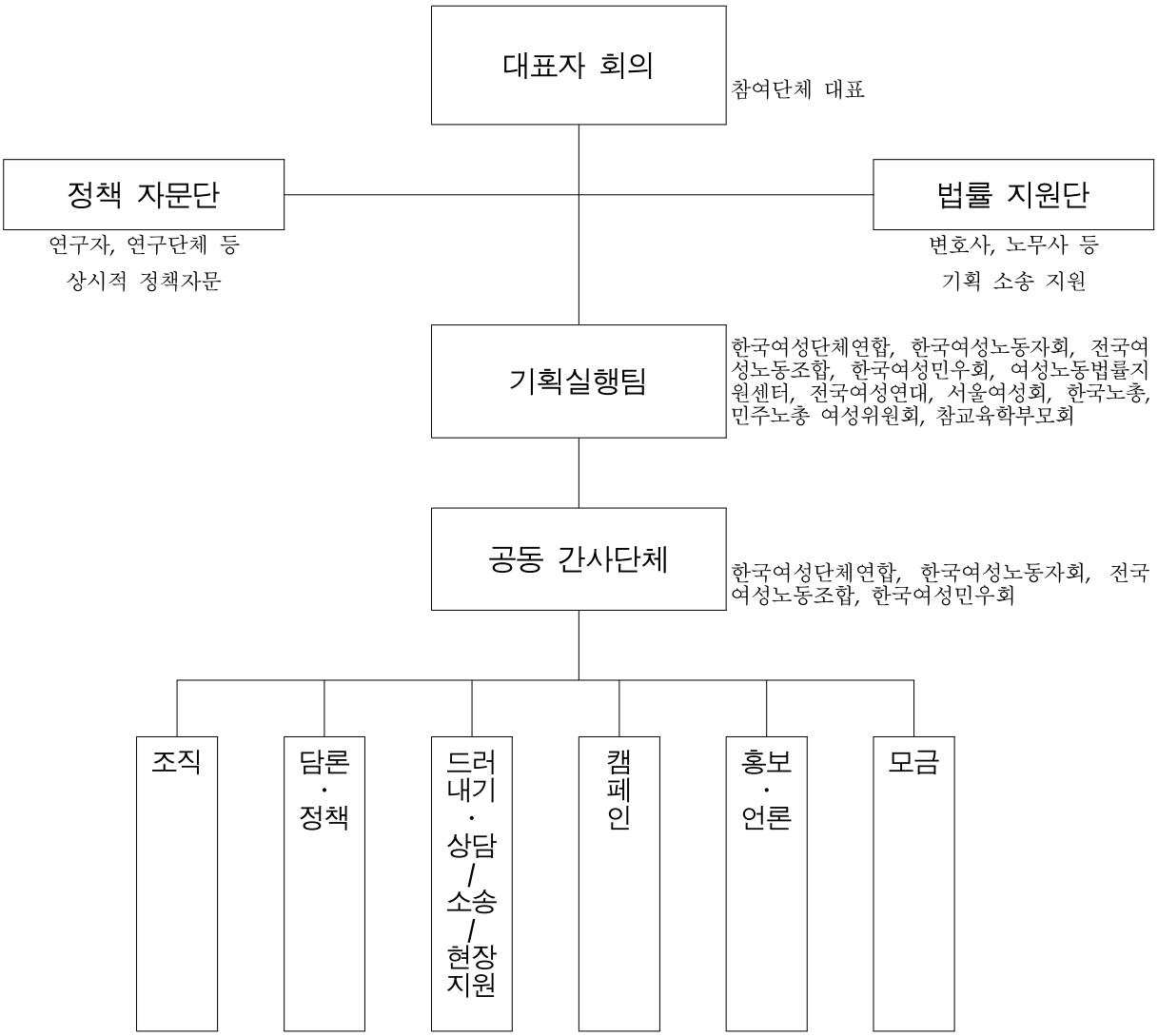
2009. 3.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제위기에 따른 여성고용악화 대응 제안
2009. 3 ~ 4	3차례의 기획회의 개최(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2009. 4. 21	경제위기 下 <민생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여성행동(가칭)> 구성을 위한 1차 확대간담회 개최 → 9개 단체 17명 참석, 여성행동의 필요성과 취지 공감
2009. 4 ~5	4차례의 기획실행팀 회의(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참교육학부모회,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기구 명칭, 조직구성안, 5대 핵심과제 및 20대 정책요구안 마련, 참여단체 조직, 발족대회(안) 마련 등
2009. 5. 21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최저임금, 천원만 올리자!' 주최
2009. 5	지역단체 회원워크샵 가이드라인 작성 및 회원워크샵 개최
2009. 5~6	지역별 생생 여성행동 조직화 시작 →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2009. 6. 3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여성행동(준) 전체 워크샵 개최 → 20대 정책요구안, 5대 주요 과제, 2009 주요 실천과제, 조직구성안, 발족대회 등 확정
2009. 6.	5, 6차 기획실행팀 회의(6/3, 6/11. 전체 워크샵에서 위임된 사항 결정 및 발족대회 준비) → 5대 과제를 3대 과제로 확정

2. 참여단체

경주여성노동자회(추) 광주여성노동자회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준) 마창여성노동자회 민변여성인권위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경기지부, 인천지부, 대전충청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2009. 6. 15 현재 총 39개 여성단체)

3. 조직 구성

(※ 지역별 생생 여성행동은 별도로 구성됨)



4. 3대 핵심과제 해설

짤릴 걱정없는 여성일자리 50만개 만들기!

누구나 돈 걱정없는 공교육 만들기!

먹고 살 걱정없는 살림살이 만들기!

짤릴 걱정없는 여성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통계로 보면 2009년 5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남자는 8천명, 여자는 21만 1천명이 감소했다. 특히 30대 여성노동자의 경우, 지난 11월부터 5월까지 77만 8천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들 중 대다수가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자들이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여성,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우리사회 취약계층이라는 얘기다. 한편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출산 장려운동을 벌이면서, 반대편에서는 경제위기라는 미명 하에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에 취약한 여성들은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되어 실업과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연봉 2,400만원 가량의 적정한 임금과 4대 보험 등 노동안정성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돌봄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한다면 돌봄노동을 사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늘릴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서비스 중심의 복지국가로 한걸음 성큼 나아가게 될 것이다.

1) 방과후 아동 보육·교육 시설 4,000개 확대를 통해 2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대표적 방과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급식·학습 및 문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전국에 3,013개소 87,291명의 아동이(2009, 지역아동정보센터), 초등학교 보육교실은 3,334개소(2008. 10, 교육과학기술부)로 약 10만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어 상대빈곤 아동수[1] 1,701,649명(14.9%)의 약 11%에 불과한 아동만이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대기자가 3만명인데 경제 위기시에는 2배로 증가하므로, 최소한 2천개의 방과후 보육·교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센터당 아동 30명 보호, 종사자 5명 채용).
- 또한 전국 초등학교 5,757개소(2008. 4 현재) 중 우선적으로 2천여 곳에 보육교실을 설치·운영하여 경제 위기로 인해 방치되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 방과후 시설 종사자의 86%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방과후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충할 수 있다.

2) 국공립 보육시설을 5,000개 확충하여 4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2007년 12월 기준 국공립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수 대비 5.7%, 이용아동수 대비 10.8%로써, 아동이 있는 가구 56.2%가 국공립 시설을 선호(2004, 보육실태조사)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1)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상대빈곤가구의 아동, 2003년 현재

- 현재 보육 이용률이 36.7%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를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이를 국공립 시설로 확충하여 국공립 시설 이용률을 30%까지 높여야 한다.

3) 0~9세 아동 중 부모의 경제활동참여로 야간보호(밤6시-10시)가 필요한 아동이나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5% 수준으로 확대하여 50,000명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1,000지역×50명).

-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경우 여성의 야간근로 및 불안정 고용 증가에 따라 자녀를 방치하게 되거나 보육부담으로 임시직, 파트타임, 부업 등 불안정고용을 선택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은 생계와 자녀양육이라는 이중, 삼중의 부담으로 양육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2008, 통계청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22.1%).
- 이에 가정보육사가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의 귀가시간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보육을 제공하고 아동 부모는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4) 65세 이상 전체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사업 현재 이용대상자 3%를 12%로 확대하여 270,000명 일자리 창출

5)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확대로 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6)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으로 공공병원 및 민간의 간병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통해 가사간병 도우미 확대 및 간병인 등 보건의료인력 4만명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7)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에 맞춰 줄임으로써 각급 학교의 교사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발굴·창출해야 한다.

<일자리 추계(안)>

분류	항목(과제)	일자리 산출근거	총일자리 창출수(명)	연간 인당 급여수준(만원)	총소요 재정(억원)
보육교육	지역아동센터, 초등 보육교실 확대	지역아동센터 2천개 초등 보육교실 2천개 확대 → 4천개*5명=2만명	20,000	2,400	4,800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5천개*8명=4만명	40,000	2,400	9,600
돌봄 서비스	방문가정복지사 파견사업	0-9세 총아동의 5%보호 (복지사 1인당 5명담당) 50명*1,000개지역	50,000	1,700	8,500
	노인장기요양사업 (3%→12%로 확대)	현재 5만명에서 27만명 추가	270,000	1,700	45,900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08년 신생아 466천명/18건 (관리사1인당연평균건수)+ 유휴율20%*실이용률70%	21,747	1,700	3,697
	재가 가사 간병서비스 확대	도시근로자가구소득60%로 확대적용 (희귀난치질환자, 암환자 등에게 확대적용)	11,500	1,700	1,955
기타	교사 충원 등 기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교실당 학생수 줄이기, 각급학교 맞춤형교사 파견등	90,000	2,400	21,600
합계			503,247	14,000	96,052

누구나 돈 걱정없는 공교육 만들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학부모 부담경비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다. 주요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을 넘어서고 있고, 이로 인해 2009년 현재,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이미 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아래와같은 다양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1)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약 167만 8천명의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해야 한다. 소요재정 : 약 1조 8,204억[2].

-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과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은 자녀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실제 중소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 가구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설립	학교 수	학생 수	입학금(A)	수업료(B)	합 계(A+B)
공 립	1,199	952,236	5,277,057	972,088,815	977,365,872
사 립	942	870,056	10,319,320	1,041,963,277	1,052,282,597
계	2,141	1,822,292	15,596,377	2,014,052,092	2,029,648,468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결산기준

2) 초·중학교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포함). 소요재정 : 약 29,243억(2010년 기준)

- 2005년 법 개정으로 모든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지만 학부모부담경비인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졸업앨범비 등의 수익자부담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학교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지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2008년 2학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차상위 계층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의 경우, 올해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토록 하는 등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맡겨져 다른 교육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금 납부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학교 및 학생수		공립		학교 및 학생수		사립		계
학교수	학생수	계	1인당 금액	학교수	학생수	계	1인당 금액	
2,378	1,683,830	302,965,157	180	653	379,820	70,890,225	187	373,855,382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2007년 기준금액)

2) 산출근거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필요재정 총액(2조 296억) - (기초수급자 지원금(1,182억)+공무원 자녀 지원금(910억)) = 1조 8,204억

<초, 중학교 수익자 부담 경비 수입 금액>

(단위 : 개소, 명, 천원)

학교 및 학생수		초등학교		학교 및 학생수		중학교		계
학교수	학생수	계	1인당 금액	학교수	학생수	계	1인당 금액	
5,733	3,925,043	1,792,979,384	456,805	2,999	2,075,311	1,091,780,411	526,804	2,884,759,795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2006년 결산안 기준)

<향후 5년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익자 부담경비 징수 예상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금 포함)>

(단위 :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초등학교	20,317	20,926	21,553	22,199	22,864	107,859
중학교	8,926	9,193	9,468	9,752	10,044	47,383
합 계	**29,243**	30,119	31,021	31,951	32,908	155,242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8

(* 비용추계 내역. 2007년 수익자 부담경비 징수액을 기준으로 앞으로 매년 3%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5년간 수익자 부담경비를 추산)

3) 계층별로 1분위부터 6분위까지 100%, 80%, 65%, 50%, 35%, 10% 등록금을 감면하도록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높여야 한다. 소요예산 : 3조 4천억원

- 2009년 현재 대학생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섰고, 방송대 등을 포함하면 총 3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학생·학부모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2007년 기준 국공립대 등록금은 OECD국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사립대는 5위로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까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현재,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비극적 상황이다.
- 대학등록금 문제는 이미 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폭등을 야기하는 대학자율화 확대와 국공립대 법인화(민영화) 정책, 등록금에 대한 학생·학부모 부담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등록금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대학등록금 감면방안>

(단위 : 조)

[분위별 등록금 감면율과 감면액]			
	감면율	등록금전액	**소요예산**
1분위	100%	1조	1
2분위	80%	1조	0.8
3분위	65%	1조	0.65
4분위	50%	1조	0.5
5분위	35%	1조	0.35
6분위	10%	1조	0.1
7분위		1조	0
8분위		1조	0
9분위		1조	0
10분위		1조	0
합계		**10조**	**3.4조**

* 등록금 총액 12조원에서 장학금 2조원을 제한 10조원이 사실상 등록금 부담 총액임.

먹고 살 걱정없는 살림살이 만들기!

1) 경제위기 하 공공요금 동결 및 생필품 가격 안정화

- 6월 1일자로 서울과 인천의 택시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훌쩍 올랐다. 인천의 경우 추가요즘 거리도 짧아져 실제적으로는 18%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고기, 생선, 휘발유 등 생필품의 가격도 1~2년새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와 가스요금도 오를 계획이라고 한다. 한전은 상반기 4.5%, 하반기 9%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르면 6월 말 인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르게 되면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또 다른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것이 명백한 가운데,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또 하나의 부담을 얹으려 하고 있다. 현 정부가 경제위기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생활재의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5. 20대 정책요구안

Ⅰ. 일자리 대책

■ 보육 · 교육 분야

1)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 보육교실 등 방과후 아동 보호 시설 4,000개를 확대하여 경제 위기 하 방치되는 아동의 약 12만명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2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센터당 아동 30명 보호, 종사자 5명 채용 기준).

2)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을 30%까지 높이기 위해서, 국공립 시설 5,000개를 확충하여 4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돌봄서비스 분야

3) 0~9세 아동 중 부모의 경제활동참여로 야간보호(밤6시-10시)가 필요한 아동이나 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부모의 귀가시간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1,000지역에 50명씩 = 50,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4) 65세 이상 전체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현재 이용대상자는 3%이다. 이를 12%로 확대하여 2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5)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2008년 신생아 46만6천명/18건×유휴율20%×실이용률70% = 21,747개).

6)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을 통해 공공병원 및 민간의 간병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여 가사간병 도우미 확대 및 간병인 등 보건의료인력 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Ⅱ. 실업 대책

■ 실업안전망 구축

7) 실업급여제도의 제도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업대책은 여전히 전무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수당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실업급여제도와 실업부조제도로 이원화된 '실업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연 소요예산 1조 7,556억원.

8) 비정규직 고용보험적용률을 정규직 수준(80%)으로 확대하는 등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을 최소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실업급여 소진자를 안전망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수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추가 소요예산 : 5조 7,669억원.

9) 용보험 미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중소영세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 소요예산 : 1조 5,740억원

Ⅲ. 서민 · 중산층 지원대책

■ 교육복지

10)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약 167만 8천명의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해야 한다. 소요재정 : 약 1조 8,204억

11)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졸업앨범비 등 초 · 중학교 학부모 부담경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소요재정 : 약 2조 9,243억

12) 계층별로 1분위부터 6분위까지 100%, 80%, 65%, 50%, 35%, 10% 등록금을 감면하도록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높여야 한다. 소요예산 : 3조 4천억원

■ 서민 금융지원 제도, 물가대책, 주거복지

13) 경제위기 하에서 전기, 가스요금,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을 한시적으로라도 동결하고 생활재의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4) 금융소외자 및 서민들에게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책은행을 설립하거나 서민금융기금을 3조 조성해야 한다.

15)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여성한부모나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상실 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Ⅳ. 여성 일자리의 질적 제고 및 산전후 휴가 · 모성보호 대책

16) 5~99인 사업장에 55세 미만이면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향후 1년간 2년 근속을 충족할 기간제 근로자 중 동일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큰 33만 470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 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소요 예산 : 2조 4,240억원

17)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에게 정부가 이를 선지급하고 추후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소요 예산 : 연간 약 1조8천억 원 / 회수율을 60%로 추정할 경우, 연간 소요액 7,200억원[3)]

3) 최저임금 미달액 선지급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회수율을 1998~2007임금채권 체당금 회수율 중위값인 60%(평균값은 62.4%)으로 추정할 경우 실제 연간 소요액은 7,200억 원으로 추산됨

18)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2009년 : 5인 이상 기업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076,350원)가 되도록 시급 5,15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19) 구조조정시 성차별적 여성노동자 우선 해고 및 결혼·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를 금지해야 하며, 비정규 여성노동자가 임신 또는 산전후휴가 중에 계약이 만료돼도 산전후 휴가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20) 현재 육아휴직 급여 50만원을 전체 노동자 평균급여의 50%로 증액해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률 11% 밖에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

6. 향후 활동 계획

(1) 매주 거리 캠페인

1) 목적 : 생생 여성행동의 요구사항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부자감세 및 4대강 죽이기 사업 대신 여성/아동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 요구

2) 방식 : 매주 1회 가량,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서 홍보물 배포

<홍보물의 예> 4대강 죽이는 23조 대신, 5천억이면 방과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요~ 부자 감세 100조 대신, 요람에서 대학까지 무상보육·무상교육하는데 8.2조면 된다네요~ 4대강 죽이는 23조 대운하 대신, 2조 5천억이면 33만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됩니다. 부자 감세 100조 대신, 짤려도 걱정없게 전국민 실업안전망 까는 데 1조 8천억!

3) 예상 지역 : 광화문 사거리, 홍대 전철역, 합정역, 영등포 시장, 강남역, 신도림역 등
(* 이후 다른 거점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며, 지역별 생생 여성행동이 발족되면 지역으로 확산될 예정)

(2) 20대 정책요구안, 정부 및 정치권에 제언 활동

(3) 경제위기 하 '여성의 삶 드러내기' 활동 : 언론기획, 온라인 공간 활용

1) 방식 : 당사자들과의 집담회("경제위기와 여성")를 통해 현실을 드러내고 대안을 모색함.

2) 내용(예시)

· 집담회 1. 경제위기와 여성해고
상담사례 워크숍을 통해 분석하였던 5가지의 해고 이슈와 관련하여 해고된 당사자들을 모아서 당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현장에서의 여성해고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증언하기

· 집담회 2. 사회서비스 영역 일하는 여성의 근로실태
보육, 교육 돌봄노동자들을 모아서 현재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실태가 어떠한지,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로 증언하기

· 집담회 3. 짤릴 걱정 없는 여성일자리 50만개 만들기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재의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후 만들어질 사회서비스 영역 일자리의 근로조건 등 제반 갖추어야 할 근로조건에 대한 제언을 모아내기

(4) 경제위기 하 '여성우선해고', '가족중심 위기 해결' 등의 가부장적 담론에 대한 대항담론 만들기

<예시>

① 남자는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으니, 구조 조정에서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자들은 살림 잘 하는 것이 돈 버는 것 아닌가?

② 기업 입장에서는 임신 여성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달갑지 않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대체 인력을 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③ 경제위기 하에서 가족이 최대의 비빌 언덕이다.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 가장이 잘 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 힘을 줘야 한다. 국가가 어떻게 모든 국민을 책임지고 안전망을 깔아주나?

④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라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싼 인건비는 어쩔 수가 없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5) 현장의 상담사례 중 필요한 경우 '소송 진행' (법률지원단)

1) 방식 :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선 해고되었거나,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소송 지원

2) 법률지원단 구성 및 소송 진행 : 법률가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법률지원 풀' 구성 중, 이 중 가장 적합한 전문가와 함께 소송 진행

(6) 지역별 생생 여성행동 조직화 및 지역별 요구 모으기

1) 지역별 간담회 : 지역별 생생 여성행동 조직화를 위해 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 간담회 계획(6월 말 ~ 7월 초). 부산, 대구, 대전, 울산에서 지역별 생생 여성행동 조직화 진행중, 이후 더 추가될 예정임

2) 지역별 요구 모으기 : 3대 핵심 과제 및 20대 정책요구안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회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조사, 회원 워크샵 등 다양한 실천행동 전개